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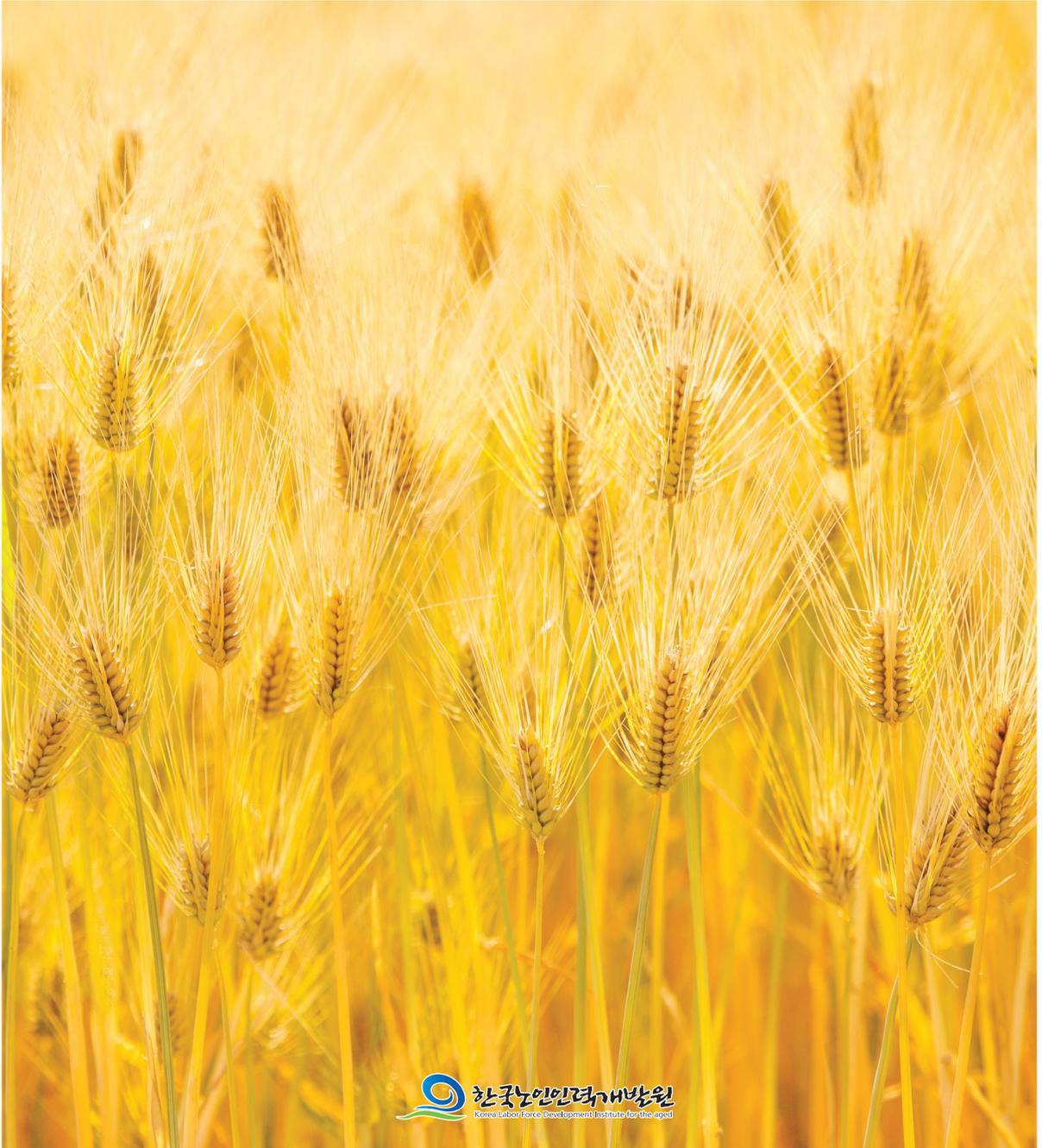
노년기 금융교육

Vol.12

2023 AUTUMN

고령 사회의
생활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CONTENTS

본 호는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권두언

- 02 100세 장수 시대,
노년기 디지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슈

- 04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 필요성과 과제**
한진수 경인교육대 교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
- 10 고령사회와 금융착취**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16 고령사회와 디지털 금융격차**
오영환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사무총장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주요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

통계리뷰

- 26 고령자 고용률 통계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 31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약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권두언

100세 장수 시대, 노년기 디지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누구나 60세나 80세가 아니라 100세를 바라볼 수 있는 100세 장수 시대에 살고 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인생의 1/3 동안 학습하고 1/3 동안 일하며 나머지 1/3 동안 여가를 누리던 과거 생애 분절적이었던 라이프스타일의 종식을 의미한다. 더 이상 30년 정도의 학습이나 준비만으로 남은 70년의 삶에 대처할 수도 없고, 30년 정도 일하고 저축한 것을 가지고 남은 40년을 살아낼 수도 없다. 바야흐로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배우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동시에 틈틈이 여가를 즐겨야 하는 이른바 생애 통합적인 삶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이 길어진 것에 비례하여 삶의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더 복잡하게 변하였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 및 기술의 혁신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날 100세 장수 시대의 노인들에게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노년의 과업들이 요구된다. 더 오래 살아가야 하므로 더욱 철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하고, 더 오래 생존해 있는 자기 부모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더 오랫동안 져야 하며, 가속화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역량이라 할 수 있는 '문해(literacy)'의 개념 역시 과거에는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문자 외에 다양한 소통의 수단들이 생겨나면서, 오늘날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자적 문해’를 넘어 ‘디지털 문해’, ‘정보 문해’, ‘미디어 문해’ 등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다양한 능력으로서의 문해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 문해(financial literacy)’이다.

금융 문해란 금융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올바른 금융 지식, 금융 태도, 금융 행위를 갖춤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한다. 현 노인 세대는 무조건 안 쓰고 저축하는 것이 올바른 금융 생활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물품화폐 시대’와 금, 은, 동 등의 ‘금속화폐 시대’를 지나 은행권이나 주화 등의 ‘명목화폐 시대’에서 성장하고 생활했던 현 노인 세대는 근검절약과 저축을 통하여 실물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대시켜 나가는 금융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 시대 및 디지털 금융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금융 문해인 ‘디지털 금융 문해’가 중요해졌다.

전자화폐시대의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과거 명목화폐 시대의 논리가 아닌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융 문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해에 취약한 노인 세대의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금융에서의 격차로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퇴직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고 급여소득보다는 연금소득 및 자산소득에 주로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노년층에게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은 단순히 스마트뱅킹 교육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며, 디지털 금융 시대의 기본적 가치와 논리, 디지털 금융에 필요한 태도, 기술, 지식 등을 포괄해야 한다. 노인 디지털 금융 교육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은 물론이고, 디지털 금융이 사회와 노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금융생활 실천에 필요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디지털 금융 활동에 필요한 기본예절과 매너에 관한 교육까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세대 간 디지털 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노년의 합리적인 디지털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로의 디지털 금융 문해력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외부 환경 및 기술, 제도 등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금융환경을 보다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노인들이 더 쉽게 디지털 금융에 접근하고 디지털 금융방식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기기 등의 하드웨어나 스마트뱅킹의 구성이나 관련 앱의 메뉴 구성 및 조작 방식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도 디지털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거나 데이터 요금 등에 대한 지원이나 공공 와이파이 등의 통신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 디지털 금융교육 및 고령 친화적인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으로 노인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100세 장수 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노인을 위한 금융 교육 필요성과 과제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¹⁾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있어야 한다. 금융이해력이란 개인이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식, 금융 기능, 금융 행위, 금융 태도를 지닌 것을 말한다(Atkinson and Messy, 2012). 일상 경제생활에서 금융 거래를 실수 없이 수행하고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삶의 필수 역량이 바로 금융이해력이다. 금융이해력이 미흡한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발생하는 각종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금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금융이해력은 독학, 금융생활 경험, 직장 생활, 사회화, 친구와의 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발되거나 축적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경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금융교육이다. 전문가, 정부, 민간 단체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학생을 포함한 젊은이에게 초점이 있었다. 조만간 사회에 진출해 본격적으로 금융생활을 하게 될,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소한 금융교육 기회를 우선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교육=학생 또는 학교'라는 고정 틀에 얽매인 탓도 있었으며, 한곳에 모여 있어 금융교육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대상이라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다.

1) 금융교육이란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개인이 금융 소비자, 금융 투자자, 노후 설계자 같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금융 거래의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며,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객관적인 외부 조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바람직한 금융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과 자신감을 개발함으로써 금융 웰빙 수준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에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대해 변명하자면,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나 충동적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으며, 경험이 풍부해 돈 관리도 책임감 있게 잘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금융 웰빙 수준이 젊은 사람보다 높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Collins and Urban, 2020).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변화 속도는 내리막길의 수레처럼 갈수록 빨라진다. 과거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노인은 금융생활에서 혼자 힘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금융이해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인이 금융이해력에 관한 한 대표적인 취약 계층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다. 얼마나 취약할까?

금융이해력에 취약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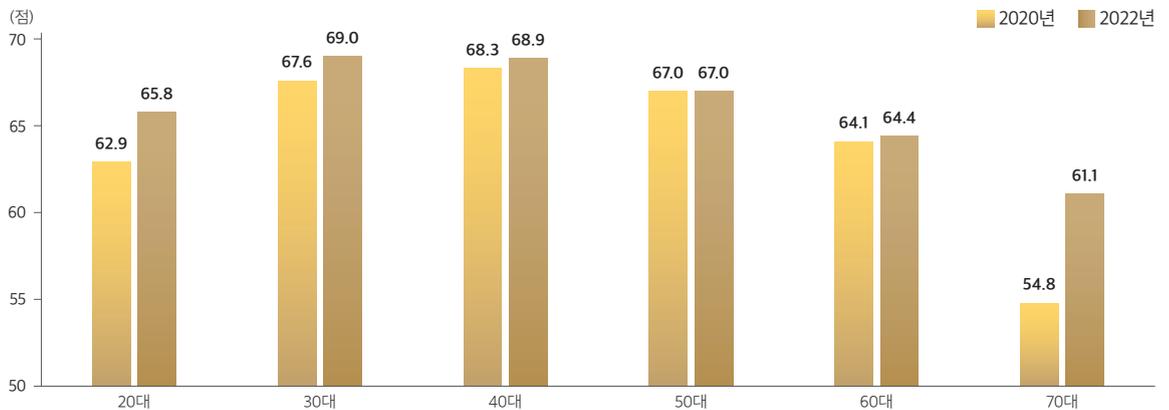
우리나라 성인(18~79세)의 금융이해력을 2년마다 공동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 노인의 금융이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수준이 20대부터 점차 높아지다가 40대에 정점

을 이룬 뒤, 이후에는 낮아져 하나의 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봉우리에 해당하는 40대를 기준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경사가 급해 70대는 50대뿐 아니라 60대보다 금융이해력이 크게 떨어지며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금융이해력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며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금융 상품을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며, 투자에 소극적 경향을 보인다. 신용카드 빚도 더 많으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수수료나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낸다. 결과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축적한 재산은 높은 사람이 축적한 재산보다 훨씬 적다(Lusardi and Mitchel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돈 관리의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의 연간 수익률이 1.3%p나 낮게 나타났다(Clark, Lusardi, and Mitchell, 2014). 만약에 1억 원을 운영한다면 금융이해력이 떨어진 탓에 10년에 1,575만 원, 40년이라면 무려 1억 2천만 원을 더 벌 기회를 연기처럼 날려버린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연령대별 금융이해력(100점 만점)



출처: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2023. 3. 29.)

노인의 금융교육이 중요해진 이유

1) 복잡하고 다양해진 금융 상품

지금의 노인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던 시절에는 여윌돈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에 가입하는 선택이 대세였다. 주식 투자도 가능했지만, 지금만큼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일부 전문가들에게나 해당하는 선택이었다. '여윌돈=은행 예금(적금 포함)'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던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이나 체계적인 금융교육 필요성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지금은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은행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예금 말고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간접투자를 하기로 하면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수십 가지에 이르러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선택 장애에 빠진다. 가상 자산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ELS, ETF,

DLS, CFD 등등 그 용어조차 파악하기 힘든 별의별 파생상품이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노인들의 지갑을 유혹한다.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교육도 받지 않은 채 예금 이외의 금융상품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약에 이런 금융상품에 관심을 보인다면, 자신의 자금 사정과 재무 목표에 어울리는 최적의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금융이해력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금융이해력이 있어야 금융회사 직원을 비롯해 주변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훨씬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고객보다는 자신이나 금융회사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회사 직원이 간혹 있다.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에 본인의 판단으로 최종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 자문의 질과 금융이해력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Kim, Mauer, and Mitchell, 2021). 이들 연구진은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구처럼 주변의 지인 대신에, 전문가로부터 금융 조언을 얻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짜로 누리는 혜택을 얻는다고 한다. 또 연구진은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금융 자문이나 전문가로부터 조언받는 일을 금융이해력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즉, 전문가의 금융 조언을 받으면 되므로 굳이 금융이해력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거나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아야 더 양질의 금융 조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핀테크 확대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이 중요해진 두 번째 이유로 핀테크(fintech)를 들 수 있다. 핀테크란 금융 부분에 기술, 특히 정보통신(ICT) 기술을 융합한 현상을 말한다. 모바일 뱅킹부터 시작해서 ○○페이 같은 간편결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 거래 등 금융 시장에서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핀테크는 양날의 검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신속하고 저렴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역량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금융생활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융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영업점을 하나씩 없

애고 있어 모바일 뱅킹 역량이 부족한 노인은 금융 거래를 위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이가 많다고 세월의 변화를 한탄하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핀테크는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이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도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정말 편하다. 이제 모바일 앱, 웹 플랫폼, 자동화 키오스크 등의 소통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역량은 노인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에게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을 금융교육으로 학습해야 한다.

〈그림 2〉 고령자가 금융 소외되는 10대 요인

- ① 디지털 역량 미흡
- ② 금융이해력 미흡
- ③ 인지 능력 저하
- ④ 육체적 쇠퇴
- ⑤ 사회적 고립
- ⑥ 연금 등 고정 수입으로 생활
- ⑦ 가족에 대한 의존
- ⑧ 금융 조언에 대한 접근 어려움
- ⑨ 고령자를 위한 금융 상품 부족
- ⑩ 금융 전문가에 대한 의존

출처: OECD(2020),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Ageing Populations.

3) 장수에 따른 위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의 은퇴 후 삶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적절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보유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다. 절세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다. 노인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나 취미 활동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산 축적은커녕 빈곤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빚을 상환하는 문제에 관한 조언과 도움을 기대한다. 황혼 이혼에 처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득 충격에 대처해야 하며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방



향을 틀어 새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여생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과 책임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장수 위험이란 말까지 생겨났을까. 장수 위험이란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생겨나는 재정적 위험을 말한다. 가령 평균 수명 80살을 예상하고 젊은 시절에 그때까지 쓸 돈을 마련해 놓았는데, 막상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20년이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대응하고 안전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금융이해력이 도움 된다.

효과적인 노인 금융교육을 위한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 시대라는 긴급한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들의 금융교육을 위한 실무단을 꾸렸으며 회원국에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기구가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인의

금융이해력을 위한 금융교육 실행에 힘쓰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급할 때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육 효과이다. OECD(2019)는 모든 학습자 집단에 두루 효과적인 유일한 방식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상 학습자가 직면하는 생애주기의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춰 적기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몇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콘텐츠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간결하되 필요에 부합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노인의 관심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경험 법칙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경험 법칙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우리가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향성을 말한다. 가령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이면, 절대 믿지 마라”는 경험 법칙은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많은 금융 상품이나 금융 사기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는 금언이다.

둘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개인 맞춤형으

로 재단해야 한다. 개인화된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므로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금융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화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선 시간 측면에서 학습자가 도움을 원하는 '바로 그때' 금융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며, 내용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외에 개별화된 상담과 코칭까지 추가할 수 있다면 개인화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금융교육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다. 노인들이 눈앞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거나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능을 바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 게임을 개발해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기들과 다양한 학습 도구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교육 효과도 검증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방법의 소통을 선호하는 고령자들도 있다. 또는 ICT 역량이 미흡한 노인들에게 디지털 학습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자칫 금융교육의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 고령 학습자 수준에 맞게 이른바 전통적인 도구와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교육에는 나이 상한이 없어

노인은 생애주기 상 연금에 의존하거나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보유 재산을 소진해 가는 단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더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이에 맞는 금융이해력이 요구된다. 평생 금융 공부를 해야 하며 금융교육엔 나이 상한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 양질의 내용과 혁신적 도구로 적기에 금융교

육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금융교육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금융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된 고령자들이 생소한 금융교육에 선뜻 참여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고령자 공동체를 통해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령 친화적인 공동체 예노인들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이 만능은 아니며 노인의 금융 웰빙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융교육 노력에 더해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자주 범하는 의사결정의 편향 또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넛지(nudge)가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노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는 선택을 피할 수 있게 저위험이나 안전한 옵션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 한국은행-금융감독원(2023).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2023. 3. 29.).
- Atkinson, A. and F. Messy(2012).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Results of the OECD/INFE Pilot Study,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15, OECD Publishing.
- Clark, R., A. Lusardi, and O. S. Mitchell(2014). Financial Knowledge and 401(k) Investment Performance, NBER Working Paper 2013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ollins, J. M. and C. Urban(2020). Measuring Financial Well-being Over the Lifecourse, European Journal of Finance, 26(4-5), 341-359.
- Kim, H. H., R. Maurer, and O. S. Mitchell(2021). How Financial Literacy Shapes the Demand for Financial Advice at Older Ages,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20.
- Lusardi, A. and O. S. Mitchell(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5-44.
- OECD(2019). Smarter Financial Education: Key Lessons from Behavioural Insights for Financial Literacy Initiatives.
- OECD(2020).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Ageing Populations.

고령사회와 금융착취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금융착취 증가추세, 대책 시급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소비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 피해로 인해 노후자산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G20에서는 ‘금융피해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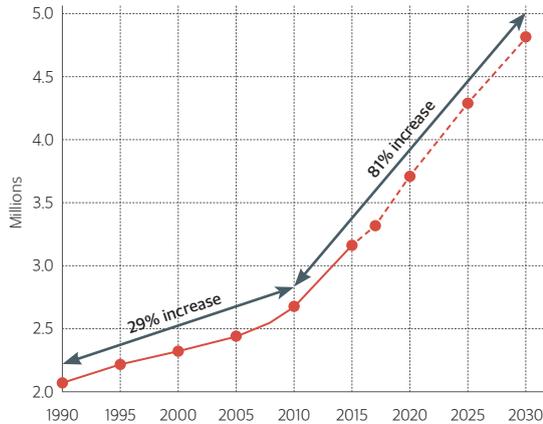
고령소비자의 피해 유형은 크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기, 금융착취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와 고령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금융사기 대책에 대한 방안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이나 친지 및 지인에 의한 고령소비자 금융착취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는 현저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을수록 금융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2021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06건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 그러나 실제 가족과 친지에 의한 금융착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고령소비자 금융착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그로 인한 피해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관련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착취 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로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금융착취 피해 노인이 증가하여 2030년까지 5백만 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8).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착취가 무

〈그림 1〉 Annual Occurrences of Senior Financial Exploitation



estimate based on June 2018 SEC Report and U.S. Census Bureau population data.

엇인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사후적으로 발생할 경우 각 주체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솔루션이 부재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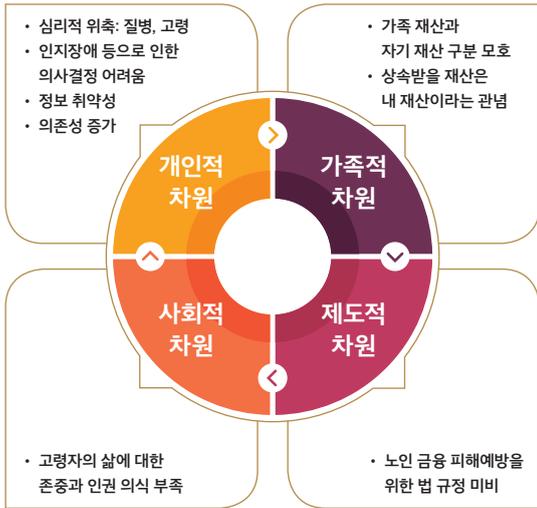
라에서 연금 생활자가 급증하고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고령소비자의 금융 착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금융착취, 어디까지 볼 것인가?

금융착취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금융착취, 영국과 일본은 금융 학대 또는 경제적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학대(Abuse), 금융착취(Exploitation)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광의의 경제적 학대는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는 경제적 착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의무가 있거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경제적 학대, 가까운 사람을 사칭하여 재산을 빼앗는 것, 보이스피싱,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의 영역도 넓게 보아 모두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출처: 정운영(2022) 고령자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 2022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포럼, 2022.11.4. 발표자료

제시하는 경제적 학대의 유형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5)에서 제시한 3가지 행위로 고령소비자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고령소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고령소비자의 재산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학대는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고령소비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고 법적 권리까지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금융착취는 경제적 학대와 유사한 의미지만 고령소비자의 재산을 가족 또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이며 그런 행위가 고령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금융착취가 재산 또는 내 돈 쓸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면, 고령소비자의 법률 권리 등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모두를 경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다.

금융착취로 볼 수 있는 행위로 재산의 이전, 사용, 증여, 처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은닉행위, 단순한 보유행위, 압력 행위, 시도행위 등 구체적인 착취의 행위에 대한 포함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금융착취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의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착취, 왜 발생하는가?

금융착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 인지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어려움, 정보의 취약성으로 인한 의존성 증가와 같은 고령소비자의 개인적 요인, 상속문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의 권리 인식, 고령자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인권 의식의 부족 등 가족·사회문화적 요인, 노인금융피해예방을 위한 법 규정이 미비한 제도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령소비자들의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고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금융착취에 대한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부모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금융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착취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문화 의식이 금융착취 피해를 간과하고 있다.

사례로 살펴본 금융착취 유형

사례 1: 자녀와 친인척에 의한 금융 착취 사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80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여 은행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딸이 통장관리와 현금인출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자동이체한 공과금이나 세금이 연체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은행에 가봤는데 어르신의 돈이 매달 자동이체로 자녀 통장으로 인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착취일까요? 어르신 허락 없이 사용되었으므로 금융착취에 해당합니다.

노후 안정된 소득을 매달 받기 위해 내 명의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싶었는데 아들 녀석이 ‘내가 물려받을 집인데 왜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계속 찾아와서 화를 내며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 경우 금융착취일까요? 네, 어르신의 뜻대로 자기의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또한 금융착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정 조카와 살고 있는 어르신은 과거 저축해 놓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최근 사업에 실패하면서 매월 100~200만 원 정도의 휴대폰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선 채널, 과거 가입한 과다한 보험료(월 150만 원 정도)를 나에게 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심한 경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2: 간병인에 의한 금융착취 사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정성껏 돌보던 간병인에게 고맙고 신뢰감이 가서 장을 보는 생활비 등 통장관리 심부름이나 금융기관에 대신 가는 일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간 사례입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준 통장인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한 간병인은 금융착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자녀가 항의했지만, 간병인은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라 반박합니다. 이때 통장과 인감을 내어준 게 문제가 됩니다. 은행 예금거래 약관은 통장과 인감이 있고 비밀번호가 맞으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은행에 항의조차 못 하고 결국 돈을 돌려받을 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금융착취의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자녀가 피해 노인 명의로 들어오는 노령연금, 주거급여 및 재난지원금 등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채 및 카드 빚 대납행위
- 피해 노인의 명의로 된 아들의 핸드폰 요금 대납행위
- 자녀가 피해 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
- 자녀의 공공주택 월세 체납을 갚아주는 행위
- 자녀가 피해 노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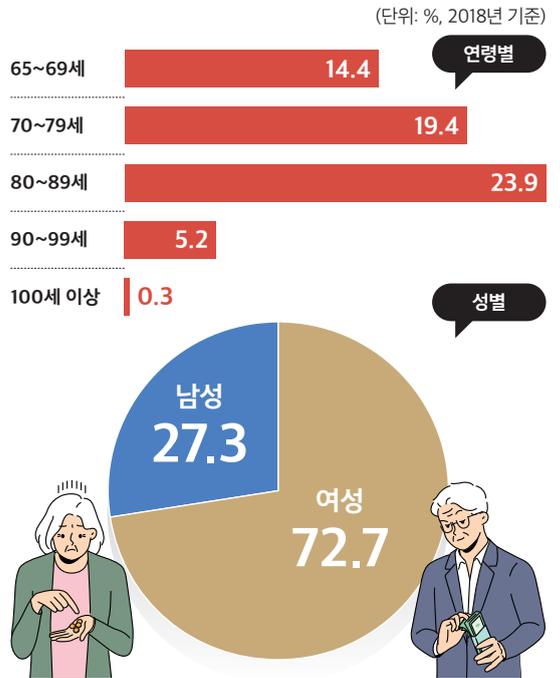
- 피해 노인에게 찾아와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
- 피해 노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신용카드사용 또는 통장 재발급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등

금융착취 피해자의 특성

금융착취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진 자산이 많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할 경우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등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으며 여성(72.7%)이 남성(27.3%)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혼자되신 어머님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89세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금융착취를 가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피해 노인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폭력성이 높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이다. 가해자는 아들

<그림 2> 금융착취, 어떤 노인이 당하나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60.4%), 딸(10.8%), 배우자(9.4%), 가족이 아닌 타인(5.8%)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을 위한 주체별 역할

고령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 정신적 절망감, 질환, 자살 등을 동반함으로써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돌봄 자원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하므로 금융착취를 예방하지 않으면 국가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영국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기금 조사(2013)에 따르면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로 인해 국가가 노인을 위해 추가로 지출하는 요양비 지출액은 연간 약 4억 5천만 파운드(약 6,750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Gilbert 외, 2013). 금융착취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당국은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착취와 관련된 내용이 서로 다른 다양한 법률 속에서 다루어지고, 그 다양한 법률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제시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착취를 예방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법과 형법 외에 민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 및 경제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 가령 서명 위조나 명의도용, 부당 인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 혹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이 관련되므로 고령자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가칭 '고령자금융착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기관이 고령소비자의 금융착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착취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령소비자 신탁 서비스 등 금융착취 예방을 위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금융착취 예방을 위한 금융인 역량 강화, 신고 의무 발생과 거래의 거절지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이를 위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정기적 교육 수여, 성과지표 반영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소비자 금융착취를 방지하려면 고령소비자의 금융 지식 함양 등이 필요한데 고령소비자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피해 여부를 발견하고 더 이상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착취 방지를 위해 고령소비자 관련 민간 단체의 대응 활동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착취에 대한 대응 수준은 광의의 노인학대 차원에서 정보 및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하는 교육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금융 관련 문제개입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착취 영역은 금융소비자관련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고령금융소비자 스스로 금융착취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노후생활 안전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금융착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자신의 통장관리 스스로 하고 관리가 어려우면 자식이라도 믿지만 말고 본인이 직접 정기적으로 자신의 통장 명세를 살펴 봐야 한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각종 대금이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은행에 일정 금액(예 100만 원)을 설정하고 설정 금액 이상 인출되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금융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장수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착취’,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금융착취 예방과 사후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계론적 관점에서 법적, 기술적, 금융 복지적 사회문화·심리적 측면의 융합적 마인드와 협력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20),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2),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2), 『경제적 학대 대응체계 마련모색 발표집』.
- 세계보건기구(WHO), abuse-of-older-people(<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buse-of-older-people>), 2020.
- 정운영(2022), “고령소비자 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포럼 발표집』, 16-33.
- 정운영, 김성숙(2023). 고령소비자의 금융착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금융소비자연구, 13(1), 5-38.
- UK FINANCE(2018). Financial Abuse Code of Practice.
- U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Summary of Result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United Nations New York.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Elder Financial Exploitation: Why it is a concern, what regulators are doing about it, and looking ahead What FINRA Stats Tell Us About Elder Abuse Claims By Joel Everest, 2018.
- Gilbert, A., Stanley, D., Penhale, B., & Gilhooly, M. (2013). Elder financial abuse in England: a policy analysis perspective related to social care and banking. The Journal of Adult Protection, 15(3), 153-163.

고령사회와 디지털 금융격차



오영환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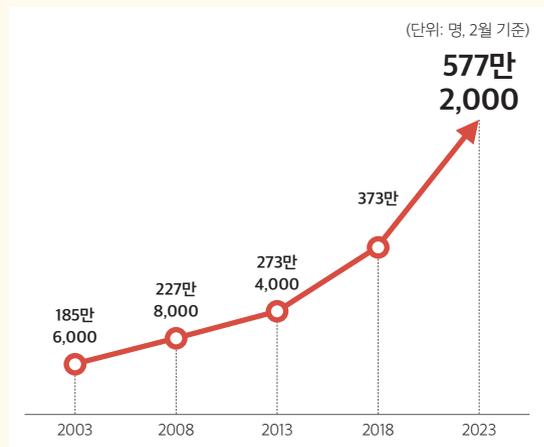
2025년 노인인구 비율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천만 시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상당히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 3,000명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 취업자가 연평균 16.5% 급증했다. 이는 1996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의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는 자녀로부터 지원 받는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 공적연금과 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일해야 하는 이유의 57.1%가 생활비에 보태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노인은 금융거래 또한 활발한데 최근 은행의 금융서비스도 다수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서비스의 온라인화는 은행 점포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약 300개의 점포가 없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모바일 기술 등

〈그림 1〉 60세 이상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은 우리의 산업과 삶을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세대 간 디지털 정보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고령층의 경제활동 제약과 금융 격차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금융 소외와 함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다.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접근, 사용 능력 및 활용도 수준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보사회 배제, 일상생활 배제, 사회적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면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고령층이 제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소외

금융 소외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배제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은행권의 비대면 채널 강화로 오프라인 점포가 통폐합되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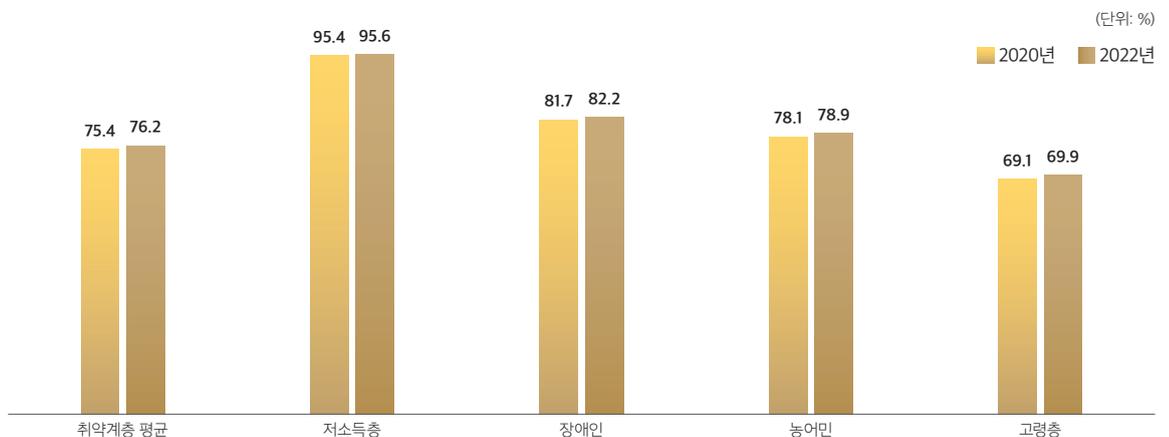
최근 은행권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등을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면서 금융소비자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7,673개에 달했지만 2018년 6,766개, 2020년 6,405개, 2021년 6,094개, 2022년 5,800개로 최근 들어 급속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연령층보다 은행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경우 점포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 소외의 문제점으로는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우대 등 혜택 제외,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구매 후 피해,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재산권 침해, △계좌이체 거래 시 조작실수에 의한 착오 송금, △금융착취 발생 등이 있다.

금융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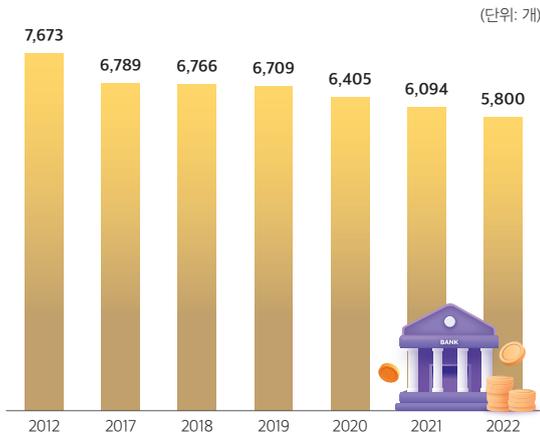
최근 핀테크, 결제 시스템, 소셜네트워크 쇼핑 등에서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금융 격차로

<그림 2>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자료: 계층별 디지털정보화수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그림 3〉 은행 점포수 변동 추이



자료: 202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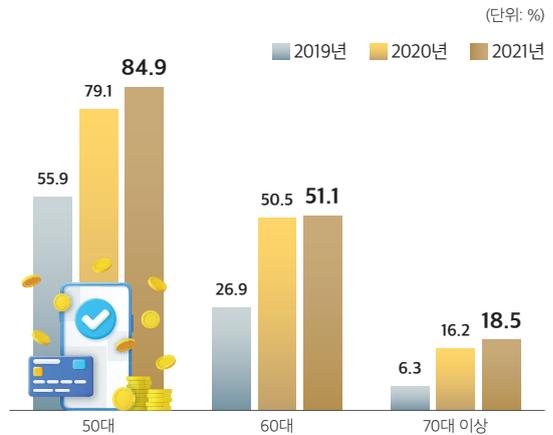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장년층의 인터넷뱅킹 이용률 추이를 보면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선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이 반영되어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해소방안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한 은행권의 서비스 강화와 함께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관련 법규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로 인해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역량과 활용 능력 향상 등은 고령자 개인의 취업, 창업, 소비 및 금융생활 전반에 활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 그리고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고령층 맞춤형 지원으로 △고령친화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금융시스템 구축,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디지털금융의 활용을 위한 문화운동 등으로 일부 계층, 일부 세대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

〈그림 4〉 중·장년층 인터넷뱅킹 이용률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는 디지털금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금융 교육 내용으로는 △디지털금융의 기본 개념과 이해, △디지털금융의 활용 방법과 이해, △디지털금융의 편리함과 혜택 공유, △디지털금융의 안전성 이해, △디지털금융을 이용한 취업과 창업, △디지털금융을 이용한 경제적 소비생활 등이 있다.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역량 향상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간 3만여 명의 고령층에게 맞춤형



자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자료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교육인 △5060세대 중장년 액티브 시니어와 7080세대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 △체험형 디지털금융 교육 ‘시니어 디지털 미션 챌린지’, △온라인 디지털금융 퀴즈쇼 ‘도전 금융 골든벨’, △은퇴 세대 시니어의 노후 행복을 위한 은퇴 교육, △시니어들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연극공연 ‘그놈 목소리’ 등을 노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50플러스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평생학습관, 지역 도서관 등에서 펼치고 있으며, 은행 점포 폐쇄 대상 지역 고령층 주민을 위한 디지털금융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맺음말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는 공정한 포용금융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개인과 지역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격차나 소외가 없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

록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고,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금융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최장기간 역임하며 세계 경제를 움직여줬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이다. 그린스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금융 문맹 즉 금융 격차를 꼽았는데 그만큼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도 금융 격차 해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주요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

‘약자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천만 노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경변화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포함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2013~2017, 2018~2022)에 이어 ‘약자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 주요 국정 과제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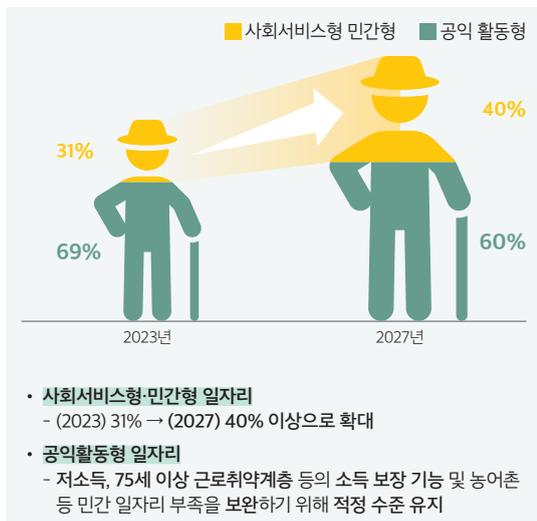


1) 국정과제 45번 中: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그림 1〉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그림 2〉 노인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



일자리 유형	정책 목표	정책 대상
공익활동형	취약 노인의 노후 소득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취약계층 (저소득) • 초고령 등 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자아실현· 사회 기여 (역량 증진, 경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경험 다 인적 자본 • 사회참여 욕구 유 • 연소 고령층
민간형	자아실현 (취·창업의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경험 다 인적 자본 • 연소 고령층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①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②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③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자 특성·수요에 맞춰 일자리 유형을 구조화한다. 소득 보장 기능, 신노년 세대 역량·경험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 등 정책목표와 대상에 따라 일자리 단가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근무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유형을 구조화한다. 특히 연령대(전기·후기고령층), 역량 등 세대 특성(베이비붐 세대·현 노년층), 지역 여건(도시·농촌) 등을 고려해 일자리 유형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추진전략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보장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한 노인일자리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 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한(가칭) 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을 신설하고, 세부 프로그램의 분류를 재배치·전환을 검토한다. 그리고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기간을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공익활동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가칭) 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신설하여 우수 공익활동 모형도 확산한다.

공익활동 내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단순 활동을 돌봄·안전·탄소제로 등 공익적 가치가 더 높은 유형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취약 노인과 사회를 잇는 ‘노노케어’, 노인의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경륜 전수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유형 중심으로 확산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 자율형 활동’ 유형을 신설한다. 즉,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 모임 방식을 접목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독거, 거동 불편 어르신 빨래 수거 및 세탁·배달, 안부 확인

종이 팩 재활용 활성화



종이 팩 수거, 세척, 건조 후 제지업체 휴지와 교환하여 취약계층 지원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농약병, 페그물 등 수거·분리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지원

〈그림 3〉 취업형 노인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



추진전략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한 선도모형을 확충하여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3년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활동 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신규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형을 활성화하고 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일자리를 개발·확산한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²⁾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기업 ‘사회공헌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협회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 전국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사업 인지도를 제고한다.

추진전략 3.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2) (성과지표(안)) 목표 달성률, 전략적 사회공헌, 인적 ESG 생산성, 탄소 발생저감률 등.

민간기업·구직 노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경험이 축적된 노인이 인턴십 종료 이후에도 지속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 취업 유지형' 지원 횟수와 규모를 확대한다. 그리고 노인과 구인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효율화를 추진한다.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노인의 근로 능력, 희망 시간 등 노인의 특성·욕구를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한다.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상담·컨설팅,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

라인(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신노년세대 중심으로 시장경쟁력 높은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선별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230건(2022)에서 1,000건(2027)으로 확대한다.

추진전략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사회서비스 전문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수행기관의 진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초기 투자비·인력 지원, 전문가

1 공익활동형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돌봄·환경재생 등 활동 확대

2 사회서비스형
비중 대폭 확대하고 민간협력 모형 활성화

3 민간형
노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4 노인일자리 제도기반 구축

1 참여수당에 물가상승 반영 추진

2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15% 이상으로 비중 확대

3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공모사업 규모 확대
*새바탕 등 노인이 공동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사업장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 활동시간과 난이도가 더 높은 2차 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 신설킨 검토

2 복지시설,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 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

3 노인의 취업욕구를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민간영역 일자리 발굴·확대

4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본조사 2024년~)로 노인일자리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 근거 마련

1 노노(老老)케어, 자원순환·환경재생 등 공익적 가치 높은 프로그램 확대

2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민간협력형 일자리 활성화

3 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 지원 확대 (인당 90만 원 → 최대 280만 원)

4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과 교육을 체계화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 재량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일자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조를 조성한다.

담당자·수행기관 등의 역량도 강화한다. 담당자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이해도·전문성 향상과 업무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유형별 담당자 배치기준 완화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기관의 경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설계하고, 대학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현장 전문가 양성 등 학계-현장 간 교류를 지원한다.

추진전략 5. 안정적 제도 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안 마련을 통해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참여자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공적 책임 강화가 가능하며, 대상자 고유 식별번호 등 정보수집이 가능해지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협업 기관의 정보연계 근거가 마련된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일자리 사회 기여와 효과(노인 빈곤 감소,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한다. 그리고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약자' 지원을 위한 중점 확대 계획

특히,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고령 노인 일상생활 지원 분야이다.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식사·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2023년 23만 명에서 2027년 31만 명까지 강화한다. 취약계층 식사 제공,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 경로당 식사·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이다. 지역사회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27만 명까지 확대한다.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늘봄학교), 국토부와 협업하여 소규모 취약 시설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셋째, 소규모 취약 시설안전 점검지원 분야이다. 노후 경로당 등 취약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타 취약 시설까지 확대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3),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고령자 고용률 통계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STATISTICS REVIEW

서론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 중, ‘높어가는 대한민국 브레이크 없나’ 등 언론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200여 개 국가 중 26개국인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 빈곤, 정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증거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들을 보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집단의 통계가 적은 것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는 하지만 통계를 발표할 때 고령층 집단의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바로 고용률 통계이다. 고용률 지표는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도가 실업률 지표에 비해 우월하고 또 표본오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고용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추정하여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1,791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약 36,000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국가지정 통계로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공식되는 고용률 통계는 고령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바로

1) 출처: TheGlobalEconomy.com

〈그림 1〉 국가통계포털 화면 캡처본



연령별 고용률이 아닌 연령 계층별 고용률만이 공시된다는 점이다(〈그림 1〉 왼쪽 참조). 연령 계층별로만 고용률을 제시하면 연령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엄밀하게 분석하기가 힘들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층의 고용률은 계층이 너무 크게 나뉘진 상태에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1〉 아래쪽 참조).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의 고용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연령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타당성 높게 파악하고 좀 더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연령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호에서는 고령층의 연령별 고용률을 실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생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고용률 지표의 개념

고용률은 다음 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눠서 도출한다.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할 때 고용률 지표가 최근에 들어와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기존에 활용되었던 실업률 지표가 지니는 큰 한계점 때문이다. 실업률은 비경제활

동인구(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를 실업률 계산 시 제외하게 되는데 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의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를 토대로는 노동시장 현황을 타당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반면, 고용률은 군인, 의무경찰 등의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노동 인력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사람 중에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고용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용 상황이 다변화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에 활용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이 가능한 최저연령이 15세 이상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률 지표는 실업률 지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OECD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실업률보다 고용률 지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기호·장동구, 2005).

분석자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률을 연령 계층별이 아닌 연령별로 도출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고령층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2013년부터 2022년). 이들 마이크로데이터는 실제 통계청이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Microdata In-

egrated Service(MDIS)라는 사이트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데이터가 유용한 이유는 자료가 집계된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개인 수준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통계치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활용한 자료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령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이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통계청과 마찬가지로 연령 계층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층의 고용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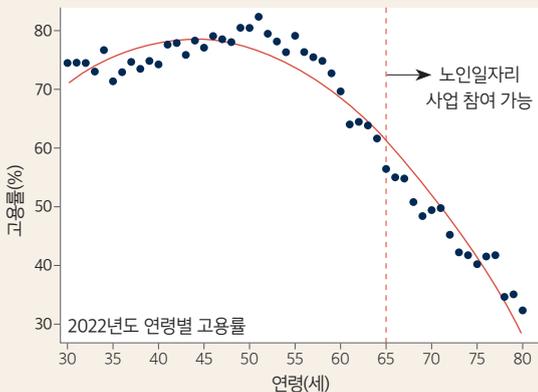
〈그림 2〉에 제시된 것은 연령별 고용률 추세이다. 결과를 보면 고용률은 60세까지는 70~80%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60세 이후부터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 하한 연령이 60세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에 제시된 고용률은 2022년 시점의 고용률인데 다른 연도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3〉에 제시된 결과는 연령별 고용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고용률은 2013년부터 2022년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고 추정 시 연도를

통제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낮게 추정되었다. 흥미롭게도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때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30대에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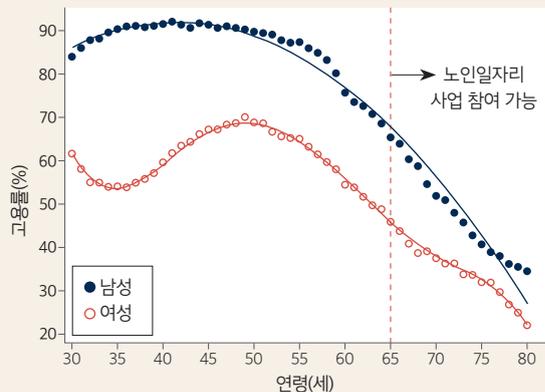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면 표본을 여러 하위집단으로 나눠서 고용률과 관련하여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림 4〉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령자의 고용률이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고용률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68세 시점부터는 이 두 집단 간 고용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렇게 고령자 집단에서 고용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고령이 되기 이전 기간(30세~60세)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임금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았기 때문에 전자의 집단이 고령자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일을 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다음으로 살펴본 결과는 고령자의 실제 고용률과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비율 간에 어느 정도 격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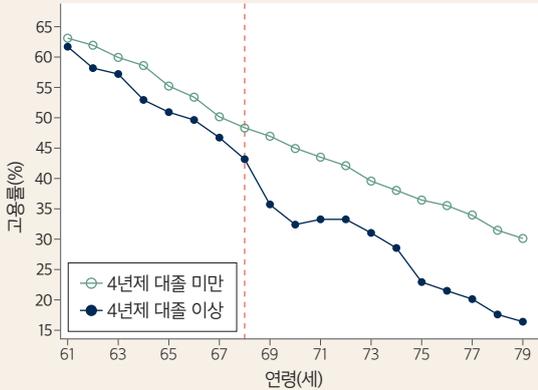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고용률(2022년 기준)



〈그림 3〉 연령별 고용률(남성 vs.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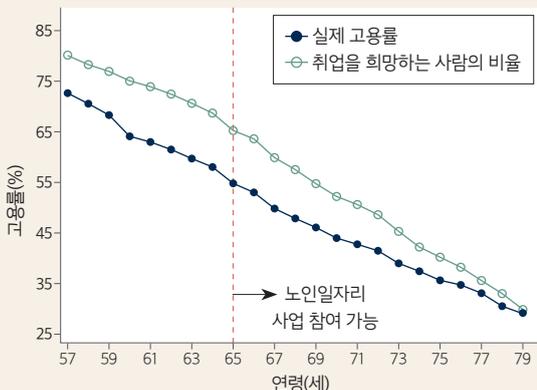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고용률(4년제 대졸 이상 vs. 4년제 대졸 미만)



나는지이다.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발표되는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좀 더 늦게 은퇴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자료를 통해 연령별로 이러한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실제 고용률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 간 격차가 65세 이전에는 무려 10%p 정도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이 격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비율의 차이를 연령별로 도출한 것을 〈그림 5-2〉에 제시하였다. 흥미롭게도 55세부터 65세까지는 이 비율의 격차가 증가하다가 65세 이후부터는 이 비율 간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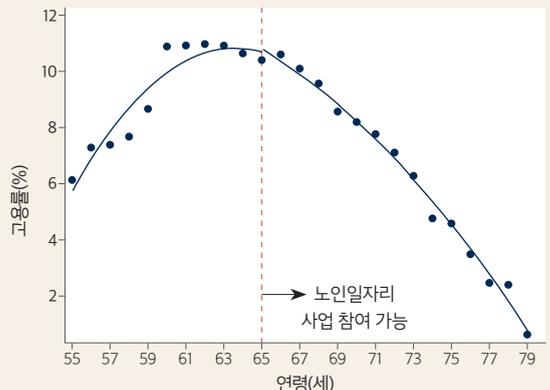
〈그림 5-1〉 실제 고용률 vs.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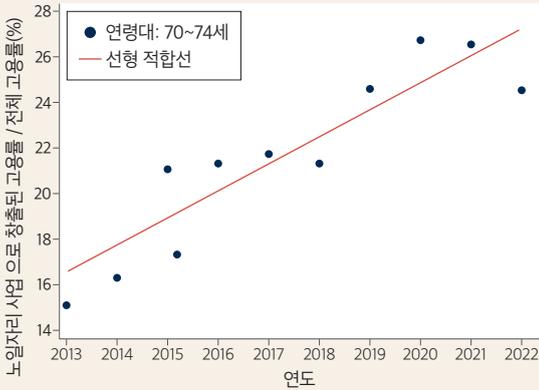
이렇게 65세부터 실제 고용률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작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취업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부터 실제 고용률과 취업 희망 비율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실제 고령층의 고용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전제가 만족해야 이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 전제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그림 6〉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6〉은 70~74세 연령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창출된 고용률이 이 연령대의 전체 고용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2013년에는 전체 고용률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여한 비중이 약 15.5% 정도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에는 그 비중이 25%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에 제시된 것은 모든 고령층 집단별로 약 10년에 걸친 기간(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동안 전체 고용률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흰색 동그라미는 2013년 시점의 추정값이고 동그라미는 2022년 시점의 추정값이다. 결

〈그림 5-2〉 연령별 실제 고용률과 취업 희망 비율 차이



〈그림 6〉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의 기여 정도(70~74세)



〈그림 7〉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의 기여 정도(2013 vs. 2022)



과를 크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연령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승하였다. 기여 정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64세로 10년 동안 기여 정도가 약 220%나 증가하였다.

둘째,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70~74세 연령대에서 노인일자리로 인해 창출된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는 약 15%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 비중이 80~84세 연령대에서는 28.7%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이러한 양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가령 70~74세 연령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기여 정도가 24.5%로 분석되었는데 80~84세 연령대에서는 기여 정도가 무려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고용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그림 5〉에서 75세 이상에서 실제 고용률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기인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결론

본 호에서는 고령자 집단의 고용률을 연령별·하위집단별로 살펴봄으로써 여러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후기고령자 집단의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용률을 연령별로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분석하면 정책적으로 좀 더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령자 고용률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생산가능인구(20~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인 부양비가 2020년 기준 인구 100명당 약 20명이었는데 이 비중이 2075년에는 80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²⁾ 즉,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55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OECD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비는 세계에서 1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호·장동규. (2005). “고용률의 의미와 유용성 분석.” 경제분석, 11(2): 108-141.

2)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으로 활약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인터뷰: 고양시니어클럽 김은희 사회복지사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정금순, 윤혜준 어르신

노노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석화 어르신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이나현 과장

사진: 이정운 포토그래퍼

*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 불편 노인, 경증 치매 노인 등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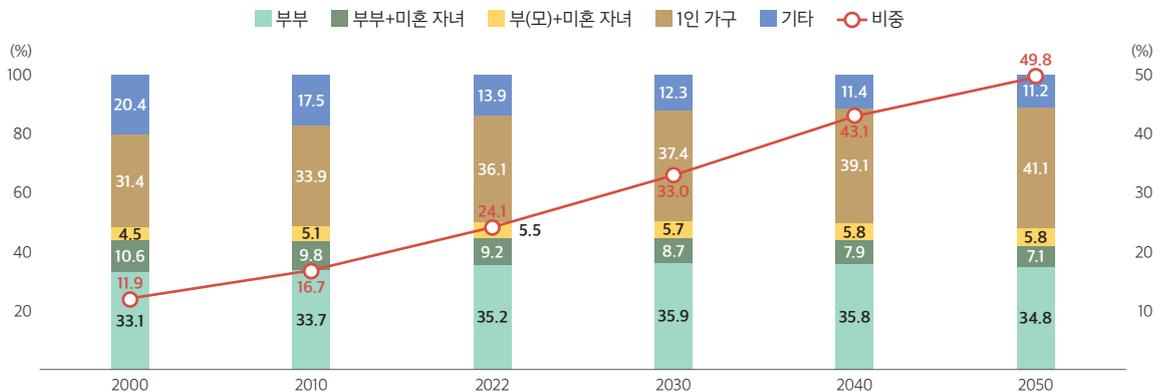
65세 이상 1인 가구 187만 시대!

2022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87만 5천 명이며 36.1%에 달한다. 노인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65세 이상 가구 중 41.1%가 1인 가구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패널조사에서 2021년 기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21%에 불과했다. 2020 노인실태조

사에서는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 생활 향유 등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1인 가구, 부부가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1인 가구는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족 내에서 도와주는 ‘가족 안전망’ 느슨해짐에 따라 경제적 문제, 고립감, 고독사, 돌봄 부족 등 기존에는 볼 수 없던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출처 : 통계청, 2022 고령자통계



정금순 참여자와 이석화님, 윤혜준 참여자가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 중 노노(老老)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로, 노노케어 활동에서는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노인일자리로 보완하며 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노케어로 알게 된 1인 가구인 서비스 이용자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찾아가 보았다.

우리는 혼자 삽니다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자인 이석화(88세)님은 혼자 산 지 20년이 넘었다. 아내와 사별하자, 자녀들이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혼자를 택했다.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비원으로 10년 동안 성실히 보냈다. 경비직에서까지 퇴직한 뒤에는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가서 각종 강의를 찾

아들었다. 서예, 운동 등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많은 분야를 배우며 일상생활을 알차게 꾸렸다. 원래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인 이석화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내가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도 좋았어요.”

이석화님의 얼굴에 씩씩한 미소가 스민다. 2019년, 그날도 노인복지관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현관문 앞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집 안까지 기어서 가까스로 들어왔다. 고관절 부상이었다. 사고 이후 몇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거동이 여전히 불편했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년 후 노화로 인해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면서 바깥 활동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걷기가 힘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니 그때부터 혼자 사는게 힘들더라고요. 모든 게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외롭고, 많이 우울하고.”

사고 이후 집 안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외딴 무인도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다. 평생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낸 이석화 님이었다. 사회와의 고립이 매우 힘들었다. 그때 만난 것이 '노노케어'였다.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인 윤혜준(78세) 님은 자녀가 결혼 후 혼자 살게 되었다. 자녀의 독립 이후 윤혜준 참여자는 봉사활동에 뜻을 두고 15년 넘게 참여했다.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식권 배포 및 무료 음식 나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봉사하고 나면 밀려오는 뿌듯함에 활동마다 마음을 다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다. 봉사활동 등으로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걱정이 생겼다.

“내가 만약 밤사이 갑자기 아프거나 숨을 못 쉬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불현듯 불안감이 몰려왔다. 대비책을 마련해 놓기도 했다. 옆집에 홀로 사는 친한 이웃과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서로 위급 상황 발생 시 현관문을 빨리 열어 주기 위한 조치였다. 윤혜준 참여자는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했다. 노노케어는 2인 1조로 한 달에 열흘 정도 활동한다. 오늘도 윤혜준 참여자는 짝꿍인 정금순(83세) 참여자와 함께 이석화 님 댁으로 향한다.

노노케어, 변화의 시작

이석화 님은 노노케어 참여자들이 오는 날이면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다. 건강이 전보다 나빠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 있을 때 노노케어 참여자들이 큰 위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 집에 온다는 게 싫었어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제는 노노케어 오는 날에 발소리만 나면 괜히 문을 열어보기도 해요.”

이석화 님은 참여자들과 대화도 하고 그림 색칠하기, 연산하기 등 치매 예방 활동도 한다. 동년배들과 소통하

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1년 반 전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혼자 오래 살아서 어떤 심정인지 잘 알거든요.”

윤혜준 참여자가 말했다. 노인 1인 가구의 정서적 어려움,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르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참여자는 어르신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말벗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참여자들은 낯설어하시던 어르신이 자신들을 향해 활짝 웃으실 때 힘이 난다. 어르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 두 참여자는 괜히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계속 말을 걸어서 대화도 시도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다. 이제는 어르신께서 농담도 먼저 하신다.

이석화 님이 “노노케어 참여자들 덕분에 미소를 되찾았다.”며 활짝 웃고 있다.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노노케어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이 저희 친오빠와 동갑이세요. 보면 오빠 생각이 나서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금순 참여자는 이석화 님을 보면 친오빠 생각에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한다. 정금순 참여자는 노노케어 활동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좋고,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니 건강해지고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저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신다고 생각하면 저도 보람 잡니다.”

윤혜준 참여자는 밤사이 혼자 있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노노케어 사업 참여 후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석화 님, 정금순 참여자 그리고 저는 서로의 연락망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자신이 이석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듯, 활동일에 자신이 오지 않으면 둘 중의 한 명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할 것이다. 이 연결 고리는 자연스럽게 생성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이 점이 윤혜준 참여자에게 안심이 되었다.

고양시니어클럽의 노노케어 사업 담당자인 김은희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노노케어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한다. 일단 서비스 이용자분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안색도 좋아진다. 참여자들이 집에 누군가 온다는 생각에 씻고 집 안 정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은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노케어 참여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위로가 되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

2010년 일본 NHK에서 방영된 ‘무연사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했던 일본은 아무와도 연을 맺지 않는 사회란 의미의 ‘무연사회’를 조명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구멍난 사회 안전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 1인 가구 증가는 당연한 문화가 되는 상황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 40%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보건복지서비스 약자’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를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노노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노노케어 유사 사업 간 중복 지원 제한을 완화해 수혜를 확대하고 노인 돌봄 관련 시범사업과 연계해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 1인 가구 돌봄과 같은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여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고령 사회의 살과 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편집위원장

변재관

편집위원

서형수, 손호성, 손균근,
박경하, 방효정, 김가원, 김지민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3년 9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와이즈타워)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27

팩스

02-6731-6100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27)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구 비누



요일 비누

자연을 담은 향기 자연담향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자연담향'은 노인일자리사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공동브랜드로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세면 MP-CP 비누, EM 세탁비누 등을 생산한다. 만들어진 제품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시니어마켓,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선보이고 있다.

천연비누 제작 이외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누 만들기, 동화책 읽어주기, 동요 부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은 어르신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세대 간 교류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12명의 어르신이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제품 생산으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품질을 인정받아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천연비누 3구·6구 세트, 요일 비누 세트 등의 답례품으로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연담향이라는 브랜드로 생산품을 확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길 응원한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자연담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87, 미추홀구청 본관3청사 1층
- 문의: 032-888-3999



9 772765 277003

ISSN 2765-2777